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6. 4.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2월 9일, 이철규의원 등 73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12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6.3.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6.4.9.)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2차 전체회의(2026.4.1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철규의원)

2008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사북사건을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과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

고하였고, 2024년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또한 사북사건 관련 고문 피해자 등이 신청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해 이를 인권침해 사건으로 다시 결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기념사업 추진을 재차 권고하였음.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고령화로 상당수가 이미 사망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의 사과를 포함한 명예회복 조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

이에 사북사건의 피해자 모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사과와 위로를 촉구하고,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등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결의안은 국가 차원의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 등에 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려는 것으로 보임.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사과 등을 권고하였음.

또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국방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임.

다만, 국가사과 이행을 위해서는, 사과의 주체 및 내용, 방식, 시기 등에 대해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결정이 필요하고 피해

와 명예회복 조치 등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입법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찬반토론 요지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은 1980년 사북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추진 등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경미한 자구 수정(45주년 → 46주년)

8. 부대의견

없음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

주 문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던 광부와 주민들의 집회가 있었다.

예정된 집회가 불허되자 광부들은 이에 항의하였고, 이 광경을 촬영하던 사북 경찰이 도주하면서 광부를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자 흥분한 광부들은 사북지서 등 주요건물을 습격하고 기물을 파괴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단의 광부들에 의해 노조 지부장의 부인이 기둥에 묶여 집단폭행 당하고, 진압과정에서 대처하던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하였다.

이후 노·사·정 대표가 11개 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계엄사령부가 ‘사북 사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200여 명의 광부와 부녀자 등 주민들을 불법 체포·구금·고문하는 등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정치·이념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시작되었던 사북 사건은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광부들과 주민뿐만 아니라, 노조위원장 가족과 진압에 나섰던 경찰관 등 모두를 피해자로 남겨둔 채 현대사의 아픔으로 남아있다.

이후 사북·고한 지역 주민들은 화해와 해원의 정신 아래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자 사북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끊임 없이 노력해 왔다.

2008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사북사건을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과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고하였고, 2024년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또한 사북사건 관련 고문 피해자 등이 신청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하여 이를 인권침해 사건으로 다시 결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며 지역 사회의 화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념사업 등 지원을 재차 권고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뤄지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령화로 상당수가 이미 사망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의 사과를 포함한 명예회복 조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사북사건 46주년을 맞아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로를 촉구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사북사건의 국가폭력 피해자, 당시 노조 지부장 가족, 경찰 측 피해자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위로를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피해자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추진 등 진

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던 광부와 주민들의 집회가 있었음.

예정된 집회가 불허되자 광부들은 이에 항의하였고, 이 광경을 촬영하던 사북 경찰이 도주하면서 광부를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자 흥분한 광부들은 사북지서 등 주요건물을 습격하고 기물을 파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단의 광부들에 의해 노조 지부장의 부인이 기둥에 묶여 집단폭행 당하고, 진압과정에서 대처하던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하였음.

이후 노·사·정 대표가 11개 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계엄사령부가 ‘사북 사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200여 명의 광부와 부녀자 등 주민들을 불법 체포·구금·고문하는 등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음.

정치·이념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시작되었던 사북 사건은 대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광부들과 주민뿐만 아니라, 노조위원장 가족과 진압에 나섰던 경찰관 등 모두를 피해자로 남겨둔 채 현대사의 아픔으로 남아있음.

이후 사북·고한 지역 주민들은 화해와 해원의 정신 아래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자 사북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끊임없

이 노력해 왔음.

2008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사북사건을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과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고하였고, 2024년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또한 사북사건 관련 고문 피해자 등이 신청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해 이를 인권침해 사건으로 다시 결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기념사업 추진을 재차 권고하였음.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고령화로 상당수가 이미 사망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의 사과를 포함한 명예회복 조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

이에 사북사건의 피해자 모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사과와 위로를 촉구하고,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등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임.